

# 「국가 오픈엑세스 정책 포럼 2021」 결과 보고

(한국연구재단 2021.06.23.)

## 목 적

- 정부지원 연구 성과의 자유로운 이용과 국내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출판 독려,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 문제해결 등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장 마련

## 개 요

- 일시 및 방법 : 2021. 6월 17일(목) 오후 2시,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생중계
- 장소 : 글래드 여의도 호텔(축·환영사 인사 및 발표/토론자 참석)
- 주관 : 국회의원 이원욱, 강득구, 김영식 의원실
- 주최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후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진행 순서

주요 순서	시간(분)	주요 내용
개회사	14:00~	노정혜 이사장(한국연구재단)
축 사	14:05~14:40 (35)	유은혜 장관(교육부) [영상] 임혜숙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상]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상]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영사		이우일 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 김재수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주제 발표	14:40~15:00 (20)	오픈엑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 서정욱 교수(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15:00~15:10 (10)	구독학술지 문제와 오픈엑세스 전환 김환민 사무국장(KISTI)
	15:10~15:20 (10)	국내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지원 방안 박숙자 교수(대중서사학회 회장,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
종합 토론	15:20~16:10 (50)	좌장 이강재(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토론자 김명환(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서울대 영문과 교수) 구영실(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대참) 위행복(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윤종민(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래(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허선(의편협/과편협 회장, 한림대 의대교수)
폐회	16:10	폐회 및 마무리

## 개회사/축사/환영사 : 자료집 참조

##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1. 오픈엑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

서 정 옥  
인천세종병원  
입상연구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앞서 인사말을 해주셨기에 바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됨. 20년간 논의된 OA의 배경을 설명 드리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공공재임. 지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다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이기 때문. 논문을 학술지에 출판하면 과거 종이저널로 출판되었고, 이는 사유재산임. 똑같은 종이저널이 도서관에 비치되면 공유자원이 됨. 도서관의 공유자원은 누구나 쓸 수 있으나, 누군가 독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저널이 나옴. 이제 전자저널이 나왔으니 모두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좋아했으나, 출판사가 개입됨. 출판사가 지식에 있어 돈을 낸 사람만 보게 하는 케이블 TV회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지식은 클럽재(자연독점재화)가 됨. 이런 상황에서의 지식을 공공재로 되돌려놓자는 이야기임. 공공재는 무료를 의미하지 않음. 누군가 비용이 지불해야 함. OA역시 누군가 그 비용을 해결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OA 추진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임. 기존에 진행된 연구재단의 정책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경희 교수 “한국연구재단 OA2021”을 제안함. 윤종수 변호사는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각 법의 하위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차미경 교수는 이대 중앙도서관장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안한 이유는 OA 문제 해결이 단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

STEPI의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를 향하여”를 살펴보면, 오픈

사이언스(OS)와 시민들이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OA가 있음. 지식에 접근하지 않고 연구는 불가능한 것임.

지난 5월 11일 국가지식정보연계법이 통과됨. 또한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OS의 한국적인 버전이 발표되기도 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지식을 만드는 것은 차별화되더라도 지식에 대한 접근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단순히 '공평'한 지원은 '지식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장벽을 해결해 주지 않음. 즉, '지식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평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지식이 강한' 사람이 더 많은 접근권을 갖고 있음. 이 접근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임.

지식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며,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소모되지 않고 공유될 수 있음. 지식을 만든 사람이 공유하기만 하면 됨. 지식에 대한 장벽이 있거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늘려 누구나 지식에 접근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대한민국에서 지식 장벽 때문에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지식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임.

OA를 하기 전에 전자저널 가격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전자저널은 출판비용이 종이저널에 비해 상당히 덜 들어가는 방식임. 1995년 언론기사에서는 인터넷의 첫 희생자로 출판사를 예측한 바 있음. 하지만 출판사는 논문이 공공재로 가는 것을 막고, 케이블 TV 형태로 운영하게 됨. 문제는 연구자들은 바로 '그' 논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를 이제까지는 도서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 해결하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OA 운동이 이뤄짐. 연구자들은 본인의 논문이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인용되어야 좋다는 점에서 OA에 동의함. 하지만 출판사는 필요 비용 이상의 돈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연구자들이 저자로서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논문을 내면서 출판사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돈(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을 지불함. 그럼 돈까지 다 지불했으니 출판사는 이제 논문을 공개하면 되는데, 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학자들도, 도서관도 모르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서울대 논문 발표 패턴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연구성과의 양과 외국학술지 논문 게재가 증가하고, OA 학술지 게재비율도 증가함. OA 논문 게재 시 대학에서 APC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이 부담하게 되는 논문 게재료가 점점 증가함. 이에 나중에는 교원 1인당 상한선을 두며 APC를 지원하게 됨. 약 34억 정도가 서울대에서 출판사에게 지급하게 됨.

하지만 서울대 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구독 비용은 2002년 8.6억 -> 2015년 89.6억으로 약 10배나 증가함. APC 비용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구독비용이 증가함. 외국 학술지를 구독하느라 도서관에서는 단행본을 구매하지 못하기도 함.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도 함.

전자저널로의 전환으로 출판비용은 감소되고, 오픈액세스 APC라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음에도 구독료가 오르는 현상은 출판사의 이익 극대화 추구가 문제인 것.

이에 외국에서는 Plan S(shock)를 시작하게 됨. 여기서 “S”는 쇼크를 의미함. 쇼크를 줘서라도 지금의 문제를 탈피하자는 의미이며, 21년 1월부터 유럽연합 모든 국가의 공공연구비로 나온 논문은 OA로 하자고 명시함. 독일 베를린 막스플랑크 학회에서 연구자, 도서관, 출판사 등이 모여 출판비용 문제를 고민하기도 함. 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고민의 깊이가 조금 흠어져 있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면 오픈액세스 정책의 허점을 돌아보겠음. OA 출판을 장려

했더니, 출판사가 기존 저널이 아닌 새로운 저널을 출판함. 이에 학술지 시장이 커지고 논문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공공재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짐.

전체 학술지의 1/4이 OA 학술지인데, 3/4정도가 되도록 해야 함.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지렛대로서의 '빅딜'임. 현재 연구자가 지불하는 APC와 도서관의 구독료 지불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묶어서 연구자가 이만큼의 APC를 지불했으니, 도서관에서는 “깎아 달라”고 하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세계 6위 지식 생산국이며, 3.3%의 논문출판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음. 학술지 구독 관련 비용은 연구자 부담으로 가되, 구독료를 확실히 낮춰준다는 보장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함.

출판사와의 협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특정 학술지 대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 도서관의 역할은 품목선정이라면, 계약은 지렛대를 기반으로 현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

2018년 국회에서도 전자저널 구독 관련 여러 논의를 하며 노력해 왔으나, 이제는 정말 차원이 다른 논의가 필요함.

대학 도서관의 구독료는 매년 3~4%씩 인상되어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산을 늘려줬기 때문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출판사에게 OA전환계약을 확실하게 해가며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

우리는 분명 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힘들어하는 문제이나, 시급한 글로벌 이슈라는 점에서 각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고, 도서관과 연구처 간의 통합 컨소시엄이 필요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을 위한 국가기관 조직 또는 담당부서가 반드시 필요함.

OA 이행 의무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상징적인 이행 의향 선언과 같이 관련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근거를

통해 외국과 공조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함.

## 주제 발표 2. 구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

김 환 민  
KISTI KESLI  
사무국장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기대가 됨. 구독학술지 문제에 대해 앞선 발표에서 상세히 다뤄주셨음. 이에 '오픈액세스는 어디로 가고 있나?'의 2번째 챕터부터 진행함.

서정욱 교수께서 지식의 '장벽'을 이야기함. 이 비용장벽이 굉장히 견고함.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OA를 추진해왔고, 많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그 비용장벽은 여전히 견고함. 2018년 발표된 자료(15년 데이터 근거)에 따르면 paywall이 85%에 달함.

OA2020, Plan S를 통해 closed 저널은 줄고는 있으나, 그래도 양적으로 보면 여전히 남아있음.

OA정책이란 통상적으로 정부, 연구기금기관, 연구기관의 OA의무화 정책을 의미함. 이는 연구성과물을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하거나 OA 저널에 출판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임.

Plan S는 연구기금기관 협의체임. 이런 협의체가 강력한 OA전환 정책을 선언하고, OA출판 또는 OA 리포지터리에 엠바고 없이 즉시 공개하라는 강력한 정책을 선언하고 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OA 정책, 저널, 리포지터리 현황과 국내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음.

SHERPA/JULIET는 연구기금기관의 OA 정책이 등록된 국가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타국은 170건 등록, 우리나라는 미등록됨. ROARMAP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금기관의 OA 리포지터리 운영 정책을 등록해 놓는 곳으로, 타국은 약 1,000건, 국내는 KISTI 한건만 등록되어 있음. DOAJ(품질이 검증된 OA학술지 등록 사이

트)에는 143종 등록됨. 연구재단 지원, 과총지원, KCI 등재 학술지는 적어도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음. OpenDOAR(기관 리포지터리 등록 사이트)도 활성화된 국내 학술지는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음. 실제 우리나라 규모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등록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논문 출판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살펴보면, 논문생산 순위는 우리나라는 교신저자 논문수 기준 8위에 해당. OA 논문 비율은 34위. 여기에는 브론즈, 엠바고 기간이 존재하는 그린로드 리포지터리 기탁 논문도 포함되었는데도 34위임.

OA학술지 수록 논문 비율은 11위로 올라감. 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 선진국은 하위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측면보다 빨리, 쉽게 게재되는 것을 선호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임. 하이브리드 학술지 OA 논문비율은 우리나라는 38위에 해당. 셀프아카이빙 논문 비율은 44위. 저조한 순위는 OA정책이 부재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임.

OA논문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Closed 논문의 양은 줄지 않음. 즉 Paywall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Paywall 자체는 여전히 견고함.

출판사별 SCIE 논문 출판량 분석을 해봄. 국내 SCIE 논문은 상위 20개 출판사에서 78%를 생산함. 우리나라는 OA 전문 출판사 이외의 구독 기반 출판사가 주요 OA전환계약 대상이 됨.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 30개 기관에서 약 70% 논문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OA에 적극 참여한다면 빠른 성과가 있을 것임.

OA전환계약에 대한 논리는 OA2020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5년부터 그 논리가 전개됨. 그 근거로 삼은 2013년 데이터 기준, 전 세계 구독료가 76억 유로(약 10조원). 전 세계 논문 2백만 건을 생산하기 위해 논문 1편당 3,800유로(약 5백만 원)를 지불하게 됨. 논문 1건의 APC는 2,000유로면 충분하고, 이를 2백만 건 생산으로 계산하면 45%의 버퍼가 발생하며 이를 다른 학술정보 유통 사업

에 투입하면 OA는 가능함. 이미 충분한 비용이 시장에 풀려있다고 논리 전개가 됨.

또 상위 20개국이 80%의 논문을 생산하므로, 이들 선진국이 연대해 OA를 추진하면 단기간에 OA전환도 가능하다고 봄. 이것이 2015년의 주장이었지만, 2021년이 된 지금, 아직도 비용장벽은 견고한 상황임. 그래서 Plan S가 선언이 되고, 여러 나라가 급히 OA를 추진해야 한다고 소리 내고 있음.

OA전환계약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 컨소시엄이 출판사와의 구독 계약을 OA 출판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의미함. 그 원칙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기존 구독료를 출판료로 지불하는 것,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하는 것, 계약조건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는 과도기적인 경로이지 목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구독료 지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 있음.

지금 OA 전환 계약은 주로 Read and Publish(RAP)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RAP는 이는 액세스 비용과 출판 비용을 함께 묶어 계약하는 것을 의미. Publish and Read(PAR)은 출판 비용만 지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액세스 권한을 포함하게 됨.

해가 갈수록 OA전환계약은 확산되고 있음. 출판사별 OA 전환계약 사례를 보면, 엘스비어는 RAP계약을 상당히 많이 체결함. 올해 3월 캘리포니아 대학과 PAR 계약을 체결함.(논문 1건 당 2,448달러) Wiley와 독일 간 계약에서는 논문 한 건당 2,750유로지불하면 OA를 허용함.

우리나라와 독일 Wiley 지불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논문 1건 생산을 위해 구독료를 4,742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나, 독일은 OA 출판을 하고 액세스까지 3,300달러(2,750유로)로 가능하게 됨.

우리나라와 캘리포니아 대학과 엘스비어 지불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논문 1건 생산을 위한 구독료로 3,188달러로 추정되나, UC는 2,448달러로 OA 딜을 함.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선진국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음. 그리고 관련 기관이 단합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한 목소리를 냄. 협상체계도 구축되어 전자정보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일을 하며 OA 코디네이터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함. 또한 참여기관의 강력한 연대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노력을 기울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5년 이내 OA전환 84% 달성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구독료로 1,800억 원 정도를 연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출판비용으로는 약 500억 원이 지불되어, 현재 총 비용이 2,300억 원 정도임. 구독료와 출판비는 예산꼭지가 다르나,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국가 R&D 연구성과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연구중심대학은 기존 구독료만으로 OA 출판비를 대체하기 어려움. 구독료 중심의 교육부의 재정을 국가 R&D 재정의 출판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국가 R&D 과제의 경우, 관련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 OA 정책을 제도화하고, 코디네이팅 기관을 지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 주제 발표 3. 국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

**박 숙 자**  
대중서사학회 회장  
서강대 교수

뜻깊은 자리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오랫동안 기다려 왔음. 본 발표에 연구자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보았음.

2019년 약 40여개의 학회, 단체가 모여 지식 공유를 선언함. 연구 활동을 보다 공공적인 것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냄. 그 방법 중 하나가 OA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음.

앞의 주제발표에서는 외국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본 발표에서는 국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드립니다. 국내 학술지에서는 저자가 논문을 내고, 비용을 냄. 학회에서는 교정과 같은 출판노동을 하게 됨. 저자와 학회가 비용과 노동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것. 하지만 학술논문이 공유되는 상용DB에 있어, 그 이용권한은 대학 소속자로 한정됨. 대학 소속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나 독립연구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논문의 생산과 지식 공유에 있어 모순과 딜레마가 있는 것.

2020년,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 논문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700명의 국내학자가 서명을 함. 당시 언론의 발표를 보면, “나는 내 논문을 판 적이 없는데...”라는 연구자의 자탄이 담긴 기사 헤드라인을 볼 수 있음. 연구자가 논문을 내고, 출판비를 내고, 저작권 양도를 한 것은 이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임. 논문의 생산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대와 지식 공유 과정 간의 부조리,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식공유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구조는 연구자도, 그리고 대학생도, 학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학술논문은 무엇이고 지식공유는 왜 해야 하는 것인지?’ 한 학술 검색 사이트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문구가 있음. 거인? 한명의 위대한 학자가 아닌 수많은 선배학자들이 쌓아올린 지식의 더미, 그 지식의 크기일 것.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 거인의 일부가 되도록 자처하는 것이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선과 안목을 갖는 것임. 즉 학술논문은 사회적 협동의 과정이라고 기꺼이 이야기 할 수 있음.

즉 논문은 공유재, 공공의 것이라는 것임. 하지만 이 공공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면 현실에서는 많이 애써주고 계시지만, 인문 사회분야 학술지 약 1,800종 중 약 10%만 지원, 그리고 그 비용의 50%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상용DB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저작권 양도 요구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음.

작년 10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조사의 인문사회 학술지 운영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학술지지원사업에서 어떤 항목 추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의에 87%가 '공공성 강화'로 답함. 온라인 접근성에 대해서도 '공공성 강화'를 답함.

공공성 강화란, 논문의 저자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논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현 상용DB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코로나 이후 더욱 개방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시대적 과제, 그리고 학술적 과제로서의 OA를 이야기하는 것임.

OA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있음'으로 답하며, 이는 공공성 강화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OA 전환은 만만치 않고 걱정과 우려가 있음. 저작권료라는 당장의 수입이 없어 걱정이 되고, 공공DB가 상용DB를 대체할 만큼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봉사노동을 해옴에 있어 OA 전환운동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관한 것임.

즉, 학회가 OA를 결정하는 것은 모험임. 그럼에도 OA 전환 학회가 생겨나는 것은 학술논문의 공공 인프라 모델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임. 논문을 낸 저자에게 상용DB에서만 당신의 논문을 볼 수 있는 것은

학회책임이 아니라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음.

연구자들은 OA 학술지 지원에 대해 출판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학술지지원사업에서 출판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100%가 동의하는 등 '출판, 교정, 교열'에 대한 지원이 급하다고 응답함.

일반 출판사는 관련 비용이 커서 인쇄소로 그 역할이 넘어가고 있으며, 교정과 교열은 대학원생, 간사들이 떠맡고 있음. 하지만 인건비를 학술지지원사업에서 신청할 수가 없음. 현재의 학술지 출판 구조는 지속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음.

여기서 공공의 역할을 묻는다면, 공공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임.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공공의 가치가 반영되는 학술지 지원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이제부터는 국내 OA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 연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OA를 추진하자는 것, OA전환을 결심한 학회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가 강화되는 OA 학술지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지원을 부탁한다는 것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한 것은 회복해야 하는 가치로서의 공공성임. 이제 OA 논의를 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학술지 출판 모델을 만들어야 함. 그리고 이 모든 논의에서 연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만들어야 함.

OA로 한다는 것은 국가지식정보의 보다 민주적인 활용과 정보의 공유를 의미함. 누구나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질 높은 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때임.

## 종합 토론

### 종합 토론

**이 강 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토론자 소개(가나다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소개드린 순서대로 5분정도 발언 후 시간이 허락하면 발표자에게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함.

**김 명 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서울대 교수

자료집의 토론문이 6페이지여서 5분 발언에 맞추기 위해 일부를 발췌해 OA를 달성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원칙과 전제조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음.

국가적 차원의 학술정책 수립의 절박한 필요가 있음.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OA의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고, 특히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됨.

과거 문제가 되었던 와셋과 같은 가짜 학술대회, 해피캠퍼스와 같은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문제들이 사실 학술정책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고 OA와도 관계가 있음. 본질적인 문제로서 학문사회가 학술활동 전반을 내실 있게 이끌어가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술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못한 정책 당국도 엄중히 성찰해야 함.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값비싼 출판비를 지불하고도 고가의 구독료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국내에서의 문제가 악화되고 방치되었음. 물론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연대를 유념해야 함.

이러한 필요에 더불어 OA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학문 연구자의 양성과 보호에 있음.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과 학령인구의 급감, 사학비리 등 심각한 위기들 속, 대학 도서관의 예산 삭감 속에서 연구자들의 필요한 학술저널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원생들과 젊은 학자들의 논문출판에서의 그림자 노동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OA를 생각해야 함.

OA는 쉽지 않음. 학문사회에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함. 지난 캘리포니아대학과 엘스비어와의 협상, 일종의 승리는 대학 내 공감대와 연구자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함.

지금까지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며, OA 추진의 첫 단추로서 출판지원 방식을 통한 국내 학술지의 OA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 조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학술지들에 대한 과도한 구독료를 해결하는 전 단계로서 중요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함.

영세한 학회들의 불공정 계약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현 등재학술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연 100~200억의 최소예산으로 OA전환을 시도할 수 있음. 이는 최소 비용임. 또한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제도를 활용하면 빠른 OA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예산지원 및 학술지평가 가산점을 통한 OA로의 유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학문사회 내 OA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OA를 선언한 다수의 학회, 지식공유연대 단체에서 보듯, 정부 정책이 이런 자율적인 학문사회의 흐름과 소통하며 실행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그 밖의 범정부차원의 대처와 업무조정이 절박함. 교육부, 과기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음. 또한 각종 법률의 문제에 있어 기존 법률들의 손질뿐만 아니라 혁신법 등 새로운 법률들의 공론화도 절실함.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전자파일 납본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생략되어 저작권법에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OA라는 것이 연구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 되서는 안 됨.

디지털집현전법은 아직 OA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논의가 담겨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저작권법 개정안도 관련 논의가 필요해보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경우, 특히 인문사회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으며 이공계분야에서조차 연구노트에 대한 우려

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봄.

O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부족함.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제고하는 일부터 굉장히 필요할 것임. 한꺼번에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강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회장)

OA라는 큰 그림에서는 동의하나, 인문사회분야나 이공분야의 약간의 온도차이나 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음.

김명환 교수께서는 OA가 국가 차원의 학술정책 수립이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학문연구자의 양성과 보호라는 중요 가치를 포함해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주심. 이어서 교육부 구영실 학술진흥과장 말씀 있겠음.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참)

이번 소중한 자리를 통해 OA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함.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시작점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반가운 마음이 있음.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서정욱 교수, 김환민 사무국장, 박숙자 교수의 발표를 뜻깊게 들음.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OA 정책 추진이 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삶과 사회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 전자저널을 통한 학술지식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OA 논의도 가속된 것이 아닌가 싶음.

특히 지난 1년, 그동안 많이 준비된 학술행사, 대회들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많이 변경됨. 이로 인해 시공간적인 제약도 많이 완화되고 접근성도 높아짐. 아울러 OA 논의도 진행이 되며 현재 OA 논의를 위한 출발점에 서있다고 생각됨.

앞의 주제발표를 들으며 발표자들 간 온도 차이를 다소 느낄 수 있었음. 과학기술분야는 수년간 OA 관련 논의된 과제와 이슈가 있고, 인문사회분야는 OA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분야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분야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그 유통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에 걸맞은 정책적인 지원 방법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임. OA 전환이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회,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많은 논의가 있던 과기분야에서는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저널에 관한 것도 주된 논의였을 것.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국내학술지 쪽은 조금 다른 방식의 논의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듦. 특히나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인문사회, 물론 이공분야 학술지 지원사업도 있으나, 주로 지원하고 있는 인문사회 학술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학술지 발간을 책임지는 각 학회의 재정적인 부분, 편집과 관련한 부분, 인건비 부분들이 학회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에 있어 OA로 가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학회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아직 OA에 대해 주체별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학계는 다급하나, 정부는 정부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예산 등에 있어 국회와 깊은 숙고를 거쳐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있음. 조금 늦었고, 다르지만, 서로 같게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쁘지만 단계별로 차곡차곡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박숙자 교수께서 전자저널에 대한 비소속, 비구독 상황의 연구자들의 정보 접근성예의 차이를 언급하심. 교육부에서 지금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음. 올해부터는 비구독 대학 연구자도 전자저널 접근에 개선이 이뤄짐. 아직 부족하고 구독 종수와 같은 부분은 확대해나가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할 것. 이에 국회와 다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김환민 사무국장 발표 자료 중, OA에 있어서 교육부와 대학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구독료를 정부 R&D 출판비로의 대체하자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가 여러 연구자들의 전자저널 접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적인 또 다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

OA에 대해서 인문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분야 쪽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포함해 교육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과제로써 접근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강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교육부 내에서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주심. 이어서 위행복 회장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회장,  
한양대 교수

이번 OA 포럼 마련에 감사드리며, 인문사회분야 학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교수처럼 컴퓨터 보급을 통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통신의 발달, 유통수단의 발달에는 연대 강화 측면과 통합지배의 강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OA는 통합지배 강화의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QS평가를 비롯해 SCI논문 중시 여기는 상황에서 국제학술지들에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소수가 그 공급의 통로를 장악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류국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국내 학술논문을 쌓아갈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I를 통해 언어장벽이 많이 해소되고, 모국어 학술논문 축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 업적평가 등에서 국제 학술지 논문을 더 인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성과는 끊임없이 시민사회와 접촉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 평가에 있어 기준을 달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의 구성, 형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학술지 평가, 업적평가 등 우리나라의 학술 제반이 OA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 제**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근본적으로 학술 자주성 차원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국내 학술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심. 이어 윤종민 교수 말씀 있겠음.

**윤 종 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A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가 가능할지를 말씀드리겠음.

OA 제도화, 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OA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출판비용이나 구독비용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의 제도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해봄. 또한 학술논문의 공개와 접근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것에 관계된 OA라면, 현재 법을 개정함을 통해 가능할 것임.

다만, OA 관련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며칠 전 제정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법에 있어 O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행법령을 분석해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과학기술기본법의 개방형 혁신활동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OA를 오픈 사이언스의 요소 중 하나로 보고, 학술연구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본다면, 개방형 연구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원 방법과도 연계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성과의 등록, 관리, 활용, 공개 등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A 의무화라든지 학술지 재정지원 측면이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학술진흥법과 같이 관련 정책의 총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에서 OA를 포함한 OS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혁신법에서는 연구보고서나 논문 등 각종 연구성과의 공개, 등록, 활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 확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규정 보완을 이뤄 제도보완을 했으면 함.

다만 OA의무화를 한다는 표현에 있어 시책추진의 측면과 권리강화의 측면(저작권 관련)을 구분해서 보아야할 것. 재정지원이나 예산 지원과 같은 시책추진은 관련 법령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으나, '의무화'와 같이 학술연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민간 출판사와의 관계에 있어 연구자 개인의 권리, 출판사의 민간 영업/기업 활동에서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함.

이에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단기적으로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추진하고, 개인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관련된 측면은 쉽게 해결될 수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나가자는 의견 드림.

**이 강 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일부 법령 보완을 통해 OA 시책추진의 근거 마련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해관계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며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주심.

이어서 이석래 국장 말씀 들겠음.

**이 석 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OA에 있어서 과기분야와 인문분야 공감대가 큰 틀에서는 형성이 되어있다고 생각됨. 세부적인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임.

필요성보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과기부는 오픈사이언스(OS)에 대해서 3년 정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음. 그런 측면에서 5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음.

국내는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과기분야의 25개~40,50여개 학회는 해외 위탁하는 것 빼고는 출판사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학회에 출판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의무로서 OA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과총의 과기분야 학술지 지원을 매년 21억 정도 하는데 이를 100억 정도 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국내에서의 OA는 조금 더 실현성이 높아질 것임.

두 번째로 해외가 문제인데, 대형 출판사와의 관계가 복잡함. 이

문제를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 약 3~40개 학회도 해외 출판사에 위탁해서 1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함. 이 해결에 있어, 25개 출연연이 엘스비어의 모든 논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공동 협약한 바 있음.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결국 코디네이터 기관이 좀 필요할 것임. 전담기관인 코디네이터 기관이 대상 기관(출연연 등)을 설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사(엘스비어)와 협상하는 역할로서 전문성이 필요함.

전 세계 3대 세계 출판사가 55%의 논문을 생산함. 이에 3대 출판사와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총 비용의 10%내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논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임. 코디네이터 기관 지정과 정부차원의 비용 지원 등을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세 번째로 플랫폼의 구축이 굉장히 필요함. 국내 학술지는 개별 사이트에 논문이 산재되어 있어, 정부 지원 연구성과물은 한 곳에서 모아둘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구축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축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논문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질 것임.

네 번째는 더 혁신적인 의견으로, 현장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임. 혁신법에서는 정부연구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논문을 6개월 ~ 1년 정도 되는 엠바고가 끝난 뒤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그 전에, 물론 현장과 논의를 해야 하지만, preprint를 먼저 공개를 하고, 정식 논문이 게재되고 엠바고가 끝나면 preprint를 정식 논문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는, 조심스럽지만, 학문의 확산의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이런 식의 절차를 현장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법제화 문제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넣으려고 검토 중에 있음.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혁신법에서도 윤종민 교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음. 법제화 문제는 특히 현장에서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은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국회의 도움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강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국내 학술지 상황, 국외 학술지 상황, 플랫폼 문제, 현장과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법제화 문제, 5가지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심.

마지막으로 허선 교수 말씀 듣겠습니다.

**허 선**  
의편협·과편협  
회장,  
한림대 교수

박숙자 교수의 정부 출판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함. 얼마만큼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 전체 R&D 예산의 0.1%를 OA 학술지에 지원하자는 의견드립니다. 21년 현재는 67억 원을 지원함. 전체 예산의 약 0.025%임. 이를 0.1% 지원하게 되면 270억 정도로 예상함.

서정욱 교수의 정부지원 연구결과물의 OA 출판 법제화 의견은 연구자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으나,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함. 현재 네이처에 논문 게재 시 1천만 원이 넘어감. 보통 3천불정도. 이 게재료를 어느 연구비에서나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부담이 덜할 것임. 보통 논문은 연구를 다 마치고 지불하게 되는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어느 연구비에서나 지출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준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결국 우리 학술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학술지를 지원할 수는 없으니 심사 후 선별지원이 필요할 것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발전한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도 심사 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음. 중국은 China STEM Journal Excellence Action Plan으로 국제학술지 육성에 열심임. 학술지를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정도임.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 지식을 공공재로 본다는 다소 동양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임. 동양에서는 지

식을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이에 Scholarly journal market을 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림. 이미 17년의 영문지 시장 규모는 11조원임. Open access journal's article processing charge가 해외는 200~1000만원, 국내는 50~100만원 수준. 국내는 정부나 학회 지원으로 가능한 비용임. 현재 국내 논문은 전 세계의 3.3%정도를 점유했으나, 국내지를 국제지로 키워서 학술지도 3%정도 점유한다면, 이 금액이 3,000억원이 됨. 국내 학술지 발행시장의 전체 예산이 1,500억 원으로 추정. 2배만 되어도 우리나라 학술지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음. 이렇게 발전할 때 상업출판사가 아닌 학회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이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림.

**이 강재**  
NRF 인문사회  
연구본부장  
(종합토론좌장)

전체 R&D 예산의 0.1% 정도를 OA에 쓰고, 국내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키워서 학술지 시장의 3%정도 점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성장시키자는 말씀 잘 들었음.

시간 제약과 논점이 많은 주제라 객석,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기에 어렵다는 점 때문에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고자 함.

현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온도 차이는 분명 있지만, O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음. 이런 논의의 장이 국회와 정부의 관심 속에서 공개적으로 열렸다는 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됨.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다만 2018년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대단한 아쉬움으로 남음. 이번 논의도 그 이후에 진전이 없다면 또 큰 아쉬움이 될 것. 지금 교육부, 과기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에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공동 주최를 한 기관들이 힘을 모아 후속작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합토론을 마칩.

- 폐 회 -

## 별첨 1. 언론보도

1. 국가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의무화해야 (한겨레, ‘21.06.18)
2. 천정부지 해외학술지 구독료… ‘오픈 액세스’ 가 해법제시 (헤럴드경제, ‘21.06.18)
3.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 성황리 개최 (충남일보, ‘21.06.18)
4.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성료…국회·정부·기관·학계 첫 공개 논의 (IT비즈니스, ‘21.06.18)
5.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논의 장 열려...국회·정부·기관·학계 참여 (충청뉴스, ‘21.06.18)
6.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 서둘러야 (위클리오늘, ‘21.06.18)
7. 매년 급격히 인상되는 해외학술지 구독료 문제....국가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의무화해야 (워크투데이, ‘21.06.18)
8.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 위한 ‘국가 Open Access’ 학술정보 무상 공유 방향 제시 (메디컬월드, ‘21.06.18)
9. 강득구 의원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 서둘러야 (스트레이트뉴스, ‘21.06.18)
10. 한국연구재단, 17일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개최 (뉴스1, ‘21.06.18)
11. 코로나 백신 ‘지식 공유’ 산물 . . . “정부R&D 논문 공개해야“ (대덕넷, ‘21.06.18)

한겨레 85면 1단 5일 전 네이버뉴스

### “국가 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의무화해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7일 오후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비 집행기관인 한국

전정부지 해외학술지 구독료...오픈 액세스... 헤럴드경제 4일 전 네이버뉴스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 성황리 개최 충남일보 4일 전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논의 장 열려...국회·정부·기관·학계... 충청뉴스 4일 전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 서... 위클리오늘 4일 전  
 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



뉴스1 6일 전 네이버뉴스

### 한국연구재단, 17일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17일 오후2시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는

연구재단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금강일보 6일 전  
 한국연구재단, 국가 차원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개최 국제뉴스 6일 전  
 국가 차원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열린다 충남일보 6일 전  
 늘어나는 해외학술지 구독료 문제...오픈액... 헤럴드경제 6일 전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



금강일보 2일 전

###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성황리 개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제공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



## 별첨 2. 포럼사진





